

K “극일, 경제 독립” N

대한민국 아베



광복군 서명 태극기

‘군세계 싸우자’ ‘한민족은 자유인이다’ 등 광복군 70명의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 담긴 ‘광복군 서명 태극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굴복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2019.8.15

74주년 광복절 태극기 물결 ... ‘반일’ 넘어 새로운 ‘극일’ 시작

오늘은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광복을 축하하는 각종 기념식이 열리고, 시내 주요 거리와 모든 가정엔 태극기가 물결치고 있다. 광주백범기념관에서는 나라사랑 체험행사가, 광주 남구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는 친일·항일 음악회가 열린다. 일제 식민통치 시절 일본 영사관으로 쓰였던 목포 근대역사관 1관 앞에서는 목포 시민들이 ‘경제, 역사 전쟁 도발 그냥 둘 수 없다’ 행동의 날 행사를 연다. <관련기사 2·3·6·16면>

올해 광복절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 더욱 뜻 깊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은 ‘극일’ (克日)로 모아져,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일 경제 전쟁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아베 정권 등 일본 극우세력들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전범 국가’에서 ‘전범 가능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분노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와 광주시내 일부 거리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NO 아베, OK 광복’ 그리고 ‘리멤버(Remember) 1945. 8. 15’ 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만든 현수막들이다. ‘아베 보이콧’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일본이 놀랄 정도다. 시민들은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각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다. 자발적인 일본 여행 자제로 인해 일본 지역 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고 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해외동포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범 기업 관련 제품이나 협찬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회사를 골라 아베 퇴출시킬 목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여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기존의 ‘반일(反日) 감정’ 보다는 아베 정부와 극우 성향 일본 인사들에게 분명한 ‘극일’ (克日)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전범기업 제품 사지 않겠다” 14일 오전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백범기념관·푸른길 공원·목포 근대역사관 등에서 각종 기념식 시민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한다” 각오 기술 의존 깨뜨려 ‘가마우지 경제’ 탈피·반 역사적 행태 뿌리 뽑아야

는 국민들의 각오와 의지가 묻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일부 첨단분야를 일본 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를 탈피하는 게 ‘극일’ (克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국가로 성장했지만,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에 수출하면 정작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구조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은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 의존적이었던 산업구조 자체를 개선해 일본의 또 다른 ‘경제 도발’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

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4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극일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 유지 등 한국 경제 생태계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

일제 식민지배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넘기 어려운 벽이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 하지만, 해

방 이후 친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역사적 사관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극우적 사고의 반역사적 행태는 ‘한국이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혐오 발언에서부터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 일본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학자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개탄스럽다. 이는 해방 이후 일제 협력자와 친일세력이 미군정에 편승해 ‘친일’에서 ‘친미’로 신분 세탁을 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의 기회가 사라진 탓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도 이번 제74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반역사적 행태를 뿌리 뽑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극일(克日)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숭한 위기를 극복해왔다.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지난 74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등을 거쳐으며 G20 회원국이 되는 등 눈부신 경제 성장도 이뤘다. 이는 우리 국민을 비롯한 한국 경제와 산업의 저력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경제 전쟁은 최종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이웃나라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양 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와 우리 국민, 기업들이 새롭고, 제대로 된 극일(克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